

#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2003.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네 가지 폭력의 모습과 노무현 정부하 인권상황

박 레 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1. 우리 사회 네 가지 폭력의 모습

폭력 · 하나

나는 밥 늦은 시간임에도 '부안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를 읽는 중이다. 부안에서 경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여러 매체들이 보도해 왔다. 그럼에도 이를 모아놓은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들은 이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일까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방패에 머리, 허리, 다리를 다쳤다는 것은 다반사이고, 전경들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하여 항의하였다고 하고...

인권단체들은 지난 11월 20일 경찰폭력 증언대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은 경찰 폭력의 실상을 담은 비디오 영상 상영 시간이었다. 11월 9일 서울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프레스 센터 골목 안에 20명도 안되는 시위대를 방패로 찍고, 군홧발로 밟고, 곤봉으로 내리까던 전경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경찰 폭력의 장면들이 이어졌다. 경찰에 항의하는 남자의 목을 정확히 겨냥하던 전경의 방패, 넘어져 엎어진 남자의 머리에서는 아스팔트를 흥건히 적시는 피가 흐르는데 그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고 가는 전경... 너무도



끔찍한 그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인 폭력이 가승을 부리고 있다. 언제나 시위대는 잡혀가고 구속되지만, 전경들도 그들의 지휘관들도 구속 하나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경들의 사기를 분돋우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마저도 엄중대처 지시나 내릴 뿐이고, 폭력시위에 정부가 밀릴 수 없다는 망발을 거침없이 해댄다. 한번도 과잉진압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시위의 현장과 그 진압의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언론들에서 전하는 시위대의 과격함만 알 뿐이다. 노동자대회는 그저 화염병이 등장한 것만이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가.

#### 폭력·물

37년만에 송두율 교수가 귀국한 것은 지난 9월 20일이었다. 재독 철학자로 하버마스라는 당대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토록 어렵다는 독일 철학 교수가 되었던 그이지만, 그는 국정원의 5차례 조사과정에서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 간첩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검찰은 그가 구체적으로 반성하여 전향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하여 구속시켰고, 지난 11월 19일에는 그를 기소하였다.

그는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는 미결수 신분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알다시피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인정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그의 수사기록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그것을 기초로 거물 간첩이라고 떠들어댔다. 국정원도 공식적으로 정형근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하였다. 공안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극우 언론들이 들고 일어섰다. 남한대 질세라 목소리를 한껏 키웠다. 송두율은 전향하라고 하고,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송두율 교수는 입국 전까지 노동당 입당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상당한 대우를 받아 권력 서열 23위인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가 전향을 하여야 국외 추방도 가능하다고 크게 떠들었다.

‘전향-그것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이 잘못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무릎 꿇는 일이다. 까짓것 하찮은 종이 한 장쯤으로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은 전향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의 사상을 끝내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점으로 알 수 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향은 폭력이다. 예전에 이 나라에서는 좌익수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면서 전향을 강요하였다. 그 폭력에 맞섰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수십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요즘 그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던 세계 최장기수라는 김선명 씨를 그린 영화 ‘선택’이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송두율 교수에게 전향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준다.

송두율 교수가 전향을 거부하자 검찰은 끝내 그를 기소하였다. 독일의 언론들은 한국에 비이

성적인 매카시즘의 광풍이 분다고 보도하였다.

#### 폭력·셋

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빈곤’ 문제를 꼽는다. 빈곤은 가난함이다.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 시대를 살아간다. 예전처럼 서로 나눠 먹을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풍부함에도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빈곤의 문제는 그렇게 성격이 변하였다.

빈곤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일 수 없게 한다. 빈곤층이 우리 사회에 8백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요즘은 새삼스럽지 않다. 반면에 부유층은 더욱 부가 늘었다고 한다. 빈곤해지면 아이들 교육도 포기해야 하고, 병원가는 것도 단념하고 몸으로 때워야 한다. 전세방을 월세방으로 낮춰가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희망은 점점 줄어든다. 우리 사회에 지금은 일상적인 거리 풍경으로 된 노숙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빈곤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빈곤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떨어지면서 빈곤을 느낀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전처럼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살림을 느낀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든다. 원래 가난하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단결해야 그나마 자신들의 몫을 쟁길 수 있는 법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 하기가 쉬운가. 전체 노동자의 겨우 12%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고 하는데도 이것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노동조합을 파괴한다.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해고를 당하면서도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거리투쟁도 하고, 감옥에도 가지만 사용자들은 눈 하나 꿈쩍 않는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노동귀족’ 운운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을 모독하였다. 사업장에 용역깡패가 들이닥쳐 노동자들을 흠씬 두들겨 패고, 병원에 입원해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조금만 불법을 저질러도 독달같이 달려들어 연행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각종 지침을 내놓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정책이라고 우긴다.

이런 현실에서 못 살겠다고 느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노동조합을 지키겠다고 분신을 해서 죽고, 목을 매어 죽었다. 그들은 자살했지만, 그들은 사실은 구조적인 폭력에 의해 타살당한 것이었다.

#### 폭력·넷

“군사독재세력인 노태우 정권이 집권 후 민주화로 분출된 시위 등을 인내하다가 공안정국으로 전환하는 데 14개월이 걸렸는데,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철도파업 공권력 투입을 시작으로 신공안정국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어느 교수가 한 토론회에서 지적한 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를 전후해 후보 시절과 인수위 시절의 입장에서 급선회하였다.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이른바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기를 포기했고, 잘못 차우친 노사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뒤집었다. 그것이 철도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으로 나타났다.

“민주화된 시대에 분신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는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폭언 중이 대표적인 것이다. 노동자들이 분신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지는 못할 망정 초상집에 가서 상주를 폭행하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그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은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운동 단체가 아니다”며 감정적 대응으로 나아갔다. 그는 “과거 재야시절 노조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까지 했다. 정부의 잘못된 절차와 판단으로 인해 야기된 ‘부안사태’에 대해서도 그는 주만들을 폭도로 모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네이스(NEIS)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인권변호사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네이스가 정보인권의 문제임을 부정했다. 파병 문제에 대한 각계의 비판에도 확고한 의지로 밀어부치겠다는 모습이다. 오로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권위에 도전하라는 듯한 강태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11월 18일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는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불법시위 대처 4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역대 정권이 공안정국으로 돌입할 때 내세웠던 이유보다도 오히려 보다 공격적이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폭력이다. 사건의 원인과 과정에서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민주적 절차를 자신이 뒤집을 때는 원칙이라고 하고, 절차를 지키라고 한다면 함의를 새겨 했다고 ‘폭도’로 몰아부친다.

‘인권’을 잘못 배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이런저런 발언들을 종합하면 그는 반인권적인 사고와 관행이 몸에 배인 것처럼 보여 우려했다. 그에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신의 권력의 지키는 ‘정치적 수단’ 줌으로써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 2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각한 후퇴 양상

위에 든 폭력의 예는 단지 우리 사회 폭력의 양상 중에 일부일 뿐이다.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의 모습은 잠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은 다시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치범에 대한 물리적 고문은 사라져 가고 있고, 법형식적으로는 사상전향제도 사라지고 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일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전반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폭력이 매우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국가는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폭력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위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의 전격적인 방침으로 설정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의 민중들의 저항은 먼저 이런 김대중 정부에서 닦아놓고, 노무현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저항이다. 신자유주의는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그 희생을 전가한다. 민중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겪을 뿐만 아니라 생존적 위기에 몰리게 된다. 올해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항의와 저항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절박함이 분노로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런 항의와 저항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폭력이란 기재를 동원했다. 노동현장에서 이미 폭력은 일상화되었다. 두산중공업에서 배달호, 한진중공업에서 김주익, 세원테크에서 이현중, 이해남,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이용석 등의 죽음은 예전의 한 사업장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이미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공권력만이 아니라 용역깡패가 동원되어도 노동자만 처벌될 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이는 파업은 종종 불법으로 낙인찍혔다.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수억원씩 부과되면서 그들의 가정마저도 잔인하게 파괴시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들이 겪는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고용불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격적인 모욕까지 동반하는 차별을 겪어야 하는 그들의 상황 전체가 반인권적인 것이다. 심지어 정부에서 각종 지침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민간사업장들이 이를 기준으로 다시 비정규직을 확산해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때에 정부는 지금껏 실태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대책이라고 세운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비정규직을 확산하려 한다.

거기에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도 20대 80의 사회로 진입해 있고, 이런 경향성은 더욱 가파라진다. 800만명에 육박한다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더욱 한심하다. 기초생활보장 요건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비현실적이다.

사람이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을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이것을 정부가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민중운동이 급진화되는 것은 이와 같은 생존권적 위기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신자유주의와 공극적인 모습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고, 민간 파시즘화로 내달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느 때보다 높다. 노무현 정부에서 드러난 몇 가지의 사례들이 이를 말해준다.

그토록 국정원 강화법이고,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비판하여도 정부는 오로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강행을 외칠 뿐이다. 몇 가지 '폭력시위'(그것도 원인을 따져 보지도 않고)를 문제 삼아 집시법의 위헌적인 개악에 나섰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사회보호법의 폐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1차 파병할 때도 미국의 다각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미 점령군을 지원하는 부대를 파견하였다.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2차 파병을 결정하고, 이의 재론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이라크에서 한국인들이 사상당한 것을 보고 파병 문제를 재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특전사가 더 많이 포함되는 파병을 하겠다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빨리 테러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부안의 문제도 잘못된 정책 결정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주민들이 의사를 무시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정부의 졸속적인 판단을 인정하였음에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주민들의 과격하다고 주장한다. 거기에서 벌이지는 '경찰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린다.

결국은 지금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적 절차에서나 그 정책 방향에서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치달아 간다. 이 경향성의 끝이 어디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권은 진전하겠지만...

발제자가 말한대로 "일반적으로 인권상황은 전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인권상황이 전진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 인권운동의 헌신과 대중들의 저항에 의해서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시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었던 5대 차별 해소책 외에는 사실 인권정책이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리버럴하고 중산층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인권 개혁은 있을 것이며, 그것은 일반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채 1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유주의적 인권개혁은 법무부에서 불완전하게 추진하는 몇 가지 과거부터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인권개선책도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 구도에서는 국가폭력이 만연하고, 그 적용도 차별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소한다.

문제는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대미종속성을 극복하느냐는 정치적인 결단을 현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개혁으로 나서도록 추동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벌에 의해 집중되어 있는 시장권력을 신자유주의 세력에게로 돌리겠다 지배분과내 권력투쟁으로 나타

날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경제성장의 후퇴를 감내하고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한 초국적 자본의 논리에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자유협정(또는 자유무역협정)에 무게를 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방점을 찍는 한 사회권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후퇴할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정부에 의해 폭도로 매도된 가운데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난도질 당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하게 유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인권의 핵심 코드는 노동인권과 빈곤의 문제이다.

이 한겨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 중이다. 그들은 강제추방 반대, 이주노동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은 서울역에서 천막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광화문에서 장기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의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은 지난 4월 이래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상도동에서 청계천에서 빈민들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리지 않으려고 투쟁하고 있다. 부안에서는 문규현 신부와 김인경 교무가 20일 넘게 단식농성 중이다. 그리고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천막들이 있다.

인권은 진전하겠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리하는 현 정권을 비롯한 인권침해세력에게 맞서서 싸울 때만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밀린다면 우리 사회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음을 나는 우려한다.

(끝)



## 2003년 법무부 인권개선사항

2003. 12. 8.

법무부 인권과 김현철



# 『 2003년 법무부 인권개선사항 평가 』

## I. 머리말

2003. 2.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목표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본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로 표방하며 새롭게 출발한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에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어느 정부때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다.

인권부문에서도 사상전향제폐지, 호주제폐지문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입과 강제출국 문제 등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

정부는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 중 법무부에서 2003년 동안 추진한 노력과 그 성과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근절 노력

### 가.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시행과 변호인참여

법무부는 2003. 1.부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sup>1)</sup>.

이 준칙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수사절차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 침해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시정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sup>2)</sup>.

1) 인권보호수사준칙의 내용으로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변호인 접견교통권확대, 장애인·아동·청소년의 보호, 임의수사의 원칙, 가혹행위금지과 증거 배제, 수사관련자에 대한 명예·사생활 보호, 출석요구할때의 유의사항, 체포 구속할때에 지켜야 할 사항, 진술거부권의 고지, 자백변증수사의 지양,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심야조사의 금지, 압수수색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금융거래자료를 추적할 때 지켜야 할 사항, 통신제한조치를 할때 지켜야 할 사항, 출국금지등을 요청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수사를 지휘할 때 유의사항, 사건을 결정할때의 유의사항,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할때의 유의사항, 중간처분을 할때의 유의사항, 구속사건을 처리할때의 유의사항, 각종 통지의 이행, 공소제기후의 유의사항, 인권보호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있으며, 총 35조로 구성되어 있다.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도는 일본에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도입자체가 형사

그런데 인권보호수사준칙과 관련하여 올해 큰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 바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도이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도가 송두율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논란이 되었고, 그 결과 한층 더 확고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sup>3)</sup>. 2003.11.11.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의 정신과 형사소송법 89조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유추하여 권리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나 유

절차상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문시에는 4가지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미란다원칙조차도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무효화하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끊임없이 그 존재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2003.11.19. 법률신문 “미란다원칙 다시 시험대에 서다”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란다 원칙이 확대되어 있어(미국에서 운용중인 미란다 원칙은 구속된 후에 피의자의 조사시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할때부터 수사기관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폭력을 가해도 정당방위가 된다는 것으로 미국의 미란다 원칙을 도입했으나 미국의 미란다원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창적 개념으로 이미 확대되어 운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절차상 권리보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상의 인권보장제도는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각종 인권보장제도가 백과사전식으로 망라되어 도입되어 있다.

3) 판례법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절차상의 권리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미국과 같은 Common Law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헌법상의 권리를 재판에서 직접 인용할 수 있고 이를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 가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문법주의 국가이므로, 헌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하위법이 없이 즉시 형사절차상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법률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가 헌법 제 12조 4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는 변호인 선임권과 접견 교통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기존의 헌법학계의 통설이었고, 피의자신문참여에 대하여는 현재 일본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검찰 또는 수사판사의 심문단계에서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영미국가에서는 경찰, 검찰단계 구분없이 피의자신문참여를 인정하고 있는 등 국가마다 그 사법체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2003.11.11. 결정에서 형사소송법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209조를 유추적용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절차상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4) 2003.11.11. 대법원 제2부 2003도402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10.31. 2003초 기 2787 준항고 결정문에서도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구속 또는 체포된 피의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 실질적 의미를 상당히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형사소송법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



의할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도는 2003.11.11. 대법원의 결정이전에 이미 검찰 및 경찰조사에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과, 송두율교수에 대하여도 국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3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다는 점인데, 문제가 되었던 점은 2003. 10. 24.조사시에는 피의자측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당일 조사할 내용중에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될 기밀사항이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였으나 대법원은 참여를 불허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었다<sup>5)</sup>.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절차상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제도에 대하여는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 나. 수사시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

2003. 6.에는 대검찰청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시달하였다.<sup>6)</sup>

이 지침은 수사기관에서 아동의 피해진술을 녹화하고 검사가 경찰 수사에 함께 참여, 지휘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를 1회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조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1회로 줄이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의 문제, 즉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의 참여하에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녹화진술의 증거능력을 당연히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도 법무부에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

- 5) 한편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9조등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아니하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제한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 6) 2003.9.22.부터 대검찰청, 서울지검에서 시범 실시하고,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등 대상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 등 검찰 모니터링 제도 도입

민간인 중 일부를 검찰 시민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검찰 운영에 반영하거나, 민간인을 검찰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민원인 등의 검찰 관련 불만을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3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다<sup>7)</sup>.

검찰 행정 및 수사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로 투명한 검찰 운영을 지향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로 검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 조언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검찰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민에 의한 검찰권 행사의 통제방안의 하나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 실시후 효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라. 항고심사회 설치, 운영

또한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결정 과정에 변호사·법학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는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sup>8)</sup>

항고사건 심사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검찰 불기소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하고,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대구고검에서 2003. 7. 1.부터 시범 실시중에 있는데 향후 시범 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2004년에 전국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마. 수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 7) 고양지청에서 시범 실시중인 시민 검찰모니터제의 운영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3년 5월 중 고양지청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통하여 모니터 위원 모집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고양시와 파주시에도 모니터 추천의뢰를 받아 30대 5명, 40대 16명, 50대 13명, 60대 5명, 70대 1명(성별로는 남성 30명, 여성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부, 공무원, 상업, 농업, 회사원 등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였다. 시민에 의한 모니터제를 시행한 결과 그간 검찰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현상이라고 치부해오던 폐쇄성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으며, 권위주의적 요소를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폐쇄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8) 일본의 경우 항고심사회와 동일한 형태의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는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즉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주어지고 있는 헌법소원, 항고제도, 재정신청제도 등이 전혀 없으며, 일체의 불복방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기소후 수사기록 열람등사인정 등 기록 열람등사제도의 개선 이전에는 본인진술 부분이나 본인 제출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 등사하도록 하였으나, 기소 후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재판절차에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 바. 영장청구전 피의자면담제도

검사의 인권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03.10.1.부터 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검사가 영장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면담하여 그 결과를 영장청구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sup>9)</sup>

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제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사절차상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바. 인권신장을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추진

한편 법무부는 현재 피의자의 방어권 신장을 위하여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의 도입과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sup>10)</sup>

9) 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제도는 2003.5.1.부터 6.30.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시범실시하였으며, 2003.10.1.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확대실시하고 있다.

1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의 도입에 대하여는 미국과 같이 검사가 피의자측 변호인과 Plea Bargaining을 통하여 혐의 인정여부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고, 양형기준법에 따라 검사가 어떤 범죄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선고형이 사실상 확정되고,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자료제출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검사가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권뿐만 아니라 면책권까지 가지고 있고, 변호사와 검사의 직업윤리의식이 철저한 구조하에서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도 수사의 방해·지연의 문제가 발생할여지가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확립되지 못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행위가 빈번함에도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우며, 수사단계에서 허위자료 제출등 수사방해에 대하여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적인 변호인의 신문참여의 보장은 자칫 인권증진보다는 수사방해 및 지연과 진실발견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형사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 독일등 선진국에서도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검찰에서 시행중인 인권보호수사준칙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인참여제에도 일정한 경우 참여를 제한할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운영지침상에 규정된 참여 제외사유로는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후 48

### III. 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신장

#### 가. 노역장유치 집행관련 개선조치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중병 환자 등이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을 허용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벌금 미납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형집행이 가능해졌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 환자 등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 나. 「준법 서약서」 제도 폐지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노동·집단행동 등)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시 대상 수형자에게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형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준법서약서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준법서약제를 폐지하였다.<sup>11)</sup>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sup>12)</sup>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인권 침해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이를 전면 폐

시간 이내인 경우, 2. 증거의 인멸, 은닉,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등 관련사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해자, 참고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운영지침 제 2조)

11) 준법서약제는 과거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되어 왔던 사상전향제가 폐지된 후,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의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것(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으로 가석방제도에서의 준법서약은 수형자에게 내심의 변경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준법서약서의 제출여부는 전적으로 수형자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준법서약제도는 사실상의 사상의 전향을 요구하거나 국법질서의 준수의를 외부에 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형성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다른 수형자들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한하여 가석방심사시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평등권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왔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2.4.25.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한층 강화하여 보장한 것이다.<sup>13)</sup>

#### 다. 구속피고인 무죄 등 선고 즉시 석방 시행

종래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더라도 신원확인, 개인물품정리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치소 등에 還所시켜 행정절차를 마친 후 석방 조치되었다. 종래의 절차는 형집행정지자 등 석방사유 발생 수용자의 경우, 검찰청으로부터 석방지휘서 원본을 송부받아 석방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연석방을 초래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있고,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제기되었다.<sup>14)</sup>

새로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에 대한 무죄 등 선고 즉시 법원에서 석방조치할 수 있어, 피고인과 가족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하게 되었다.

#### 라. 보호감호제도 혁신 추진

한편 현재 법무부는 피보호감호자의 인권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보호감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다.<sup>15)</sup>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4.25.결정, 98헌마425,99헌마170,498(병합)

13) 그러나 대한변협 2002년도 인권보고서에서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입국과 관련하여 준법서약제를 강요한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한 입국허가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상 준법서약서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송두율 교수의 입국과 관련하여 준법서약서를 제출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14) 그러나 즉시 석방의 경우, 전담직원의 지정등으로 계호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영치금품 등 개인용품 지급 및 석방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가 곤란하며, 충분한 신원확인 없이 즉시 석방하게 됨으로써 오인석방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 현재의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감호자의 처우가 수형자의 처우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 사실상 이중처벌이며, 신체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 피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미비로 재범방지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 수용된 피감호자의 다수가 단속절도 상습범등 빈곤계층에 집중되어 사회계층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도는 보안처분의 유형으로 헌법에명문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수차례결정 일관되게 합헌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보호감호가 이중처벌이라거나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재범율억제효과와 측면을 보면, 1980년 이후 21년간 전체 범죄는 233% 증가하였으나 절도사범은 87% 강도 강간 성폭력등 강력사범은 154% 증가에 그쳐 상습범죄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점을 감안해 보면 재범방지 효과가 분명 있으며, IMF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의 어려움으로 2000년도에 가출소한 487명의 재범율이 46.8%에 달하였으나, 81년도 이후 2000년도까지 누적 재범율은 32.9%의 통계를 보이고 있고, 가출소자 재범율은 97년 41.7%, 98년 46.4%, 99년 30.2%, 00년 46.8%이며, 그 외에도 가출소자중 4범이상 전과자가 93.1%나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보호감호가 재범통제에 효

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대폭확대, 근로보상금 현실화추진, 보호감호 요건 강화, 감호기간 조정 등을 비롯하여 사회보호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04년까지 보호감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sup>16)</sup>

#### 라. 보호관찰대상자 현지상담제 실시

보호관찰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출석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상담실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보호관찰소가 전국 30개지소에 불과하므로 격오지의 경우 상담을 위하여 원거리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개월의 2-3회 정도씩 지정된 일자에 보호관찰관이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사무실 등에 설치한 현지상담실에 출장을 가서 해당지역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자 위치에서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열린 새로운 법무행정서비스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 IV. 인신매매·성매매·가정폭력 등 근절 노력

과가 있으며, 재범율이 41%인 일본이나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 보호감호제도가 재범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호감호의 주된 대상이 단속절도범이라고 주장에 대하여 청송피감호자중 74%가 생계형 단속절도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전체 절도사범을 분석해 본 결과 전과 10범 이상이 13.1%, 4범이상이 93.9%에 이르고 그 수범도 전문소매치기, 기업형절도단, 흥기를 이용한 야간주거침입등 전문절도범이 87.5%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고 이를 생계형 단속절도범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와 관련하여 과도한 징벌이나 부당한 계구사용 등으로 피감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교정질서와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징벌제나 계구사용에 대하여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피감호자들의 기본권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무정책위원회에서도 감호제도의 혁신을 매우 심도있고 토의 중이며, 보호감호 개선방안 확정전 과도적 처우개선을 실시하여 2003.6.~11. 825명을 가출소시켰으며(전년 동기 대비 377%), 근로보상금 현실화 예산을 19억 5천만원(전년대비 139% 증액) 확보하고, 11. 3.청송보호감호소 부지에 가족 만남의 집을 개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6) 참고로 외국의 상습범 대책에 대하여는 형벌을 매우 중하게 가중하는 국가로 영국과 미국이 있고, 보호감호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있고, 감호기간은 독일은 상한제한이 없고 10년마다 재심사, 오스트리아는 장기 10년, 노르웨이는 장기 5년 법원허가로 갱신가능, 덴마크는 장기 20년이고 5년씩 연장가능, 이탈리아는 상한제한없이 최소집행기간으로 상습범은 2년, 직업범은 3년, 성벽범은 4년이며, 벨기에에는 장기 20년을 감호기간으로 하고 있고, 집행방법을 보면, 독일은 행형법 140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집행하고, 이탈리아는 농원교도소, 노동소에서 집행, 덴마크, 벨기에와 우리나라는 특수시설에서 집행, 그 외 국가는 일반 교정시설에서 집행하고 있다.



### 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법무부는 2003. 3.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개정 법률은 가정폭력 사범이 퇴거·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보육시설에서 피해 아동의 취학·전학 사실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 나. 성매매·인신매매 특별단속

성매매·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2년도에 「외국 여성 강제 매춘행위 단속 지시」를 하달하고,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의 출국유예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을 원인으로 한 채무 등의 확보를 위하여 여권을 강제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02년 중 일선 검찰에 3회에 걸쳐 성매매·인신매매 등 단속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지시하였고, 검찰·경찰의 적극 단속 결과 같은 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인신매매 사범은 총 445명(구속 64명)에 이르렀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결과 우리나라는 금년도 공표된 미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에서도 인신매매방지 1등급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다.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상담·보호시설 안내」 책자 발간·배포

한편,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수사관계자에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상담·보호시설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검찰청 형사부 검사실에 배포하였다.

배포된 위 책자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각 보호시설 현황과 함께 보호시설의 종류 및 설치근거, 입소대상과 보호기간 등이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고 검사 및 참여계장 1인당 1부씩 배포되어, 수사과정에서 각종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보호시설 인계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고려하였다.

### 라. 보호소년사건 제도개선

#### ○ 불구속 송치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조사제 도입

- 종래, 비교적 사안이 중한 구속 송치 소년 위주로 비행 원인을 규명하고 비행성 제거를 위한 교육·지도지침을 제공해 오던 분류심사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 사건 대상으로 확대 시행, 소년의 인권보호에 획기적 전기 마련하였다.

#### ○ 분류심사관 심리참여 제도 시행

- 소년사건 심리 과정에 소년의 성행과 비행 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이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심리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처분 결과 도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 소년원생 특기개발을 위한 예능소년원 신설

- 소년원 특성화 교육 영역을 예능분야로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를 실현하였다. 연극영화, 실용음악, 창작미술, 영상사진 등 4개학과 120명의 학생이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공간을 완비하여 9. 1.부터 운영 중에 있다.<sup>17)</sup> 소년원생의 특성화 교육이 추가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실제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해내는 소년범 교육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sup>18)</sup>

## V.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노력

### 가. 호주제 폐지추진

남자가 우선하여 호주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그동안 여성단체

17) 안산의료소년원을 공주치료감호소와 인접한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전하여 분류심사 및 의료소년원 기능통합 수행, 기존 안산의료소년원은 예능소년원으로 기능전환하였다. 안산예술종합학교(안산소년원)의 강사는 연극영화과, 실용음악과, 창작미술과, 영상사진과 4개의 교육과정에 총 65명의 강사를 확보하였으며, 2003.9.개교하여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협력학교 및 자원강사를 활용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으며, 2004.3. 개교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8) 소년원 교육은 현재 직종 신설 및 변경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을 다양화 하고, 부산소년원등 5개 기관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소년원 특성화 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직종신설의 예를 들면 헤어디자인과(대전), 제과 제빵(제주), 건축환경설비(광주)등이 있다. 또한 부산 소년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CAD, 미용 등 13개 과정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 11. 현재 66명을 교육중에 있고, 52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37명이 각종 기능자격을 취득하였다.



로부터 여성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가족제도는 그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 및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후에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현행 호주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직시하고 2003. 4. 29.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 5. 16. 여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를 포괄한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이 발족되었다. 법무부도 2003. 6. 4. 학제, 법조계, 행정자치부 등으로 구성된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한 후 10. 28. 민법중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확정하고, 11. 6.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 심도 깊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나.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노력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을 동반하여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여성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7. 18. 수사절차상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Task/Force팀을 발족, 여성관련 범죄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종전의 미비한 법률, 제도 및 수사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여성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T/F는 법제도의 개선을 담당할 법무부 공무원 5명과,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할 교수,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인권보호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 다.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확대

의사소통의 불완전성 및 국내 법규의 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0. 4. 1.부터 국내거주 외국인 중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실시하

여 왔으나, 그 범위가 근로자의 근로관계사건에 한정되어 왔으나 2003. 4. 15.부터 내국인과 동일하게 모든 법률문제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방침에 따라 2003. 11. 15.부터 정부합동 단속이 시작되었고, 정부는 2003. 11. 25.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인 권보호대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강제출국 등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동회의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적극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되더라도 승소금을 외국인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국제송금을 하여 주는 방안을 적극 활용키로 하는 등 법률구조를 더욱 확대키로 하였다. 그리고, 2004. 1. 1.부터는 국내거주외국인에 대하여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민·형사상 법률구조를 확대함으로써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내용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라.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합법화

금년 7. 31.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8월1일부터 본격적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sup>19)</sup>

- 19) 고용허가제란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외국인력제도를 말한다.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시장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 고용허가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노동허가제가 있다.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발부하고, 외국인의 입국후 국내에서취업토록 하는 제도이다.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국무총리산하에 외국인 정책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두어 외국인력 도입 업종과 규모등 계획을 매년 10월 1일까지 공표해야 함.
    - 1개월간의 내국인 채용노력에도 국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는 노동부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및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가입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임금채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못하게 함
    -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노동권보장
    - 정부의 불법체류자 처리대책에 따라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미만인 자는 출국후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법에 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당시 8월말로 예정되었던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출국시한 유예 등 산적한 문제로 인하여 조기도입등을 주장하는 주장도 많았으나 임금상승, 노사분규등의 이유로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았다.<sup>20)</sup>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우선 29만명의 불법체류자 중 22만명이 8월 강제출국 대상자들이었으나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합법화의 길이 만들어져 강제출국의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sup>21)</sup> 또한 인력 송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인력송출관련 온갖 편법불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입출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현존하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거나 하나의 사업장은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 실시하여야 함.

· 2004. 8. 1. 시행

20) 고용허가제가 기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와 함께 병행 실시됨으로써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면 고용허가제위주로 외국인인력 채용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사업주 측면에서 보면 첫째,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나, 고용허가제에 의한 경우 근로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둘째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기간이 평균 6개월이 소요되나,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국내인 채용 노력 1개월만 하게 되면 노동부에 전산입력된 외국인근로자를 즉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채용기간이 매우 신속하며, 근로자의 측면에서 보면 산업연수생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도 수당의 개념으로 받고 근로조건의 보장이 되지 않는 반면,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정식 근로자이므로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장이 되는 고용허가제를 선호할 것이라는 점이다.

21) 현존하는 외국인력제도는 크게 세가지인데,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산업연수생제도가 있다. 먼저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는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행행,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취업이 가능하며,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 카드제를 도입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복수사증 발급 체류자격 상한 확대 및 체류자격의 활동 허용등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중에 있다.

둘째,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해외투자기업의 현지 고용인력 기능향상과 산업설비, 기술수출업체 등의 해외기술이전을 위해 현지법인의 종업원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에서 연수를 시키는 제도로 허용기간은 최장 2년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연수 허용인원을 제한하였다.

셋째,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4.월 연수 2년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용되지는 않으나 노동부 지침에 따라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시간의 야간 및 휴일연수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최저임금보장등을 적용하고 있다.

2003.10.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취업중인 전문기술인력은 20,952명,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12,165명, 산업연수생 40,590명, 연수후 취업자는 15,139명이며, 비전문 취업자로서 단순기능인력 취업자는 74,185명이며, 불법체류 취업자는 219,13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을 부칙에 따라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끝내고,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중에 있다.<sup>22)</sup>

단속과 관련하여 서울, 인천, 화성 등 주요 외국인 보호시설에 노동부 직원과 법률구조공단등과 연계하여 임금체불등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국장애사유를 적극 해소하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진출국을 함께 유도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VI. 교정업무관련 인권개선노력

### 가. 수용시설 출장상담제 실시

법무부는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상황 개선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 6. 16.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들에 의한 수용시설 정기 출장상담제를 새로이 시작하였으며, 7. 21.경까지 시행 약 1달 여만에 전국 44개 구금시설의 수용자 약 1,600명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징벌·처우 등 관련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수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나. 수용자 징벌제도 전면 개선

법무부는 그 동안 인권위원회로부터 일부 개정권고가 있었던 수용자 징벌제도와 관련하여 징벌의 수단으로 과도한 계구의 사용을 금하는 등 징벌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교정 및 징벌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면

22)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부의 취업확인을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부터 합법화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의 80.9%인 18만여명이 합법화되었다. 합법화 신청자 가운데 중국인이 55.7%인 10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동포가 39%인 7만여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순이었다. 이들은 내년 8월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3월 현재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을 받을 수 있게되고,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에는 일단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11.17.-28.까지 경찰과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223명, 고용주 250명 등 모두 1,473명을 적발하고 이중 751명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적인 징벌제도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중에 있다.

#### 다. 소수종교 신봉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

교정시설 내에서 종래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 신봉 수용자들에 대하여만 허용해오던 종교집회를 소수종교(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 등) 신봉 수용자에 대하여도 2003. 7. 4부터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 라. 서울구치소 유아놀이방 개관 등 수용환경 개선

서울구치소에 유아놀이방을 설치하여, 유아 대동 민원인의 불편 해소 하고, 유아들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여성 재소자의 경우 월 1회 근로를 면제해주고, 신체장애자·노약자의 경우 일반 재소자들에게 부과된 양보다 작업부과량을 경감해 주도록 교도작업규정을 개정하여 수용중인 여성·노약자의 인권을 제고하였다.<sup>23)</sup>

#### 마. 수형자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 확대

2001년 3월부터 교정시설 내에 전문학사과정을 설치하여 소정의 교육과정 수료 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후 2001년 2월 충북 청원군 소재 주성대학과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청주교도소 내에 「주성대학 흥덕캠퍼스」를 유치, 전산정보시스템 및 전자상거래과를 개설하였으며, 2003년 2월 처음으로 40명의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3월에는 순천교도소에 '청암대학 선평캠퍼스'를 추가로 유치, 관광호텔조리과 40명을 선발하여 주성대학의 IT 관련학과와 차별화 되면서도 계열별 특성을 살리는 학사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 바. 收容者 遠隔畫像接見 확대

23) 2003.4. 교도작업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 노약자 책임 생산량을 일반 수용자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여자 수형자에 대한 유급 보건휴역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000년 7월, 수원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원격화상을 시험운영한 결과, 수형자 및 민원인으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1년에는 청송·광주·영등포·부산 및 청주교도소 등 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2년 말까지는 전국 44개 교정기관에 모두 원격화상장치를 설치하여 현재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수용자 가족들이 원격화상을 통하여 원거리까지 면회를 가지 않고도 화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접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접견자는 가장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원거리 소재 교정기관의 수용자와 법무부 정보고속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으로 화상 접견 실시함으로써, 원격지 접견자 불편을 완화하였다.<sup>24)</sup>

#### 사. 교정시설내 수용거실 취침등 설치

수용자의 취침시 소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면을 곤란하게 함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25)</sup>.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3.9. 산하 교정시설의 취침등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강릉, 장흥교도소에 취침등을 시범설치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전국의 교정시설에 취침등을 설치할 예정이다.<sup>26)</sup>

24) 예를 들면, 서울 영등포 소재 접견자는 부산교도소 수용자 접견을 위해 부산교도소까지 갈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영등포구치소를 방문, 부산교도소 수용자와 화상 접견 실시하는 방식이다. 교정시설의 확충과 의료환경의 개선은 예산과 인력확충의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이며, 현재 법무부는 2011년까지 충주구치소 등 9개 교정시설을 신설하고, 순천교도소 등 8개 기관을 신개축할 예정이며, 2006년까지 의사 34명을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174명을 추가증원할 계획이다.

25) 교도소 등 수용시설내에서는 보안상의 취약지대로 작용하여 시설물 손괴, 도주 등 보안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유사시 긴급대처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어, 교정사고의 방지, 수용자의 신변 보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완전소등은 어렵다.

26) 법무시설기준규칙(법무부훈령 제475호)은 법무시설의 취침전 조도를 300 Lux 이상으로, 취침시간 조도를 60 Lux 이하로 조절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설치되고 있는 취침등의 경우는 취침에 쾌적한 수준으로 조도를 낮춰(10~20 Lux 수준) 하여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 Ⅶ. 출입국 및 국적업무 및 기타 개선사항

### 가. 난민인정 절차 개선

난민신청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청기간을 입국일로부터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고, 난민심사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난민인정실무협의회 위원회 민간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하여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sup>27)</sup> 그결과 2001년까지 1명에 불과하던 난민인정자가 2003년도에만 12명에 이르고 있는 등 최근에는 난민인정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sup>28)</sup>

난민인정자의 증가와 아울러 정부는 난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해오고 있다.

-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하여 취업이 가능토록 조치.
- 해외여행을 원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면제함으로써 해외여행의 자유 보장
- 또한, 경제능력이 없어 취업등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 국민에 준해 의료비, 생활보조비 등 지원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난민 인정 전담 부서 및 '난민구조센터' 설치를 주요 추진 업무로 선정하는 등 난민업무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sup>29)</sup>

### 나. 귀화허가자에 대한 서약서 징수 폐지

27) 난민인정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면접 및 사실조사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 출입국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인정실무협의회 개최, 난민인정여부 협의
-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인정협의회 개최, 난민인정여부 협의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그 인정여부 최종결정

\* 난민인정협의회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원 : 관계기관 국장급 11명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 국정원 방첩단장,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경찰청 외사관리관, 적십자사 국제협력국장, 대한변호사협회(박찬운변호사), 대한국제법학회(정인섭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은방희회장))

28) 2003.11.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난민 인정은 2001년 1명, 2002년 1명, 2003년 12명 합계 14명이다.

29) 한편 법무부는 약 150명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난민구조센터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중에 있다.

귀화허가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반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수받았으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서약서 징수를 폐지하였다.

### 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절차 개선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귀화하고자 하는 경우 귀화신청자에게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만 실시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하였다.

### 라. 중국동포 입국절차 개선

중국동포입국절차를 개선하여 국내거주자가 중국친척을 초청하는 경우 중국국적 방문자의 방문입국가능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결혼, 귀화 등을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연간 2명 이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Ⅷ. 국제인권관련 업무

### 가. 국제인권규약 관련 업무

금년에는 2003. 1. 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심사, 8월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심사가 있었으며, 또한 고문방지협약 정부보고서 작성,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서 작성이 계속 진행되었다.<sup>30)</sup> 그리고 8월에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선택의 정서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와 관련하여 강용주에 대한 결정과 남기정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sup>31)</sup>

30) 아동권리협약은 보건복지부,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법무부,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여 정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다만 영문 정부보고서의 제출은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고문방지협약은 외교통상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치중에 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관한 국제규약 정부보고서는 법무부에서 초안을 작성중에 있다. 각 협약에 대한 정부보고서 심사시에는 외교통상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합동으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받고 있다.

31) 강용주에 대하여는 사상전향제에 따른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상의 권리침해 등을 인정하고 적절한 배상, 재발방지, 위원회 결정의 번역공표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고문을 번역 공표하고, 이미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제등이 폐지되었으나 유엔의 권고사항을 유념토록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으며, 배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등 우리나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음을 회신하였다. 그리고 남기정에 대하여는 규약 선택의정서 제3조의 보호범



#### 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이행입법추진

우리 정부는, 지난 20세기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잔학행위의 희생자가 되어 왔음에 유념하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 기소는 국내적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력을 제고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에 공감하며, 2000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처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과 아울러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간의 협력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다.

#### 다.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2003. 3. 31.(미국일자) 미 국무부는 2002년도 세계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sup>32)</sup> 동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전반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5년 단임의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한 사실을 지적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sup>33)</sup>

#### 라. 프리덤하우스 국제자유도 평가

금년도 프리덤하우스 국제자유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유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도 평가에 있어서도 자유국가로 분류되었다.<sup>34)</sup>

위 내에 있지 않다면서 진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하였다.

32) 미 국무부가 197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국제인권보고서는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과 원조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 정부의 공식문서이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무역법(Trade Act)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매년 3월초에 의회에 보고되고 있다.

33) 그 외에도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또한 사법부의 독립이 최근에 강화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가정폭력, 강간,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고, 여성은 계속하여 법적·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인신매매도 문제중의 하나로서 한국은 아시아계 여성, 아동등의 인신매매의 발생국이자 경유국임을 지적하였다.

34)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리덤하우스는 1978년부터 매년 192개국을 대상으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기준으로 각국의 자유도를 평가한 세계자유상황보고서(Freedom in the World)발표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 언론의 자유도를 평가한 언론의 자유 평가보고서(Press freedom survey)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도 5. 28.경, 2002년도 세계 151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관련부분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는 등 전년도에 비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sup>35)</sup>

평가방법은 우선 각국의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각 1점부터 최저 7점까지 부여하여, 두부분의 합계 1-2.5 자유국, 3-5.5 부분자유국, 5.5-7 비자유국으로 분류하며, 언론의 자유도 평가는 법치환경 30점, 정치적영향 40점, 경제적 압박 30점으로 합계 0-30까지는 자유국, 31-60까지는 부분자유국, 61-100까지는 비자유국으로 분류한다.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부분 2003년 평가에서 평균 2점(1993년부터 동일)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자유국가로 분류, 북한은 7점으로 부자유국가로 분류되었고, 언론의 자유도 2003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합계 29점으로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와 함께 자유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북한은 96점으로 부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 참고로 2002년 :한국 30, 북한 96, 2001년 :한국 27, 북한 100 이었다.

35) 우리나라 관련 주요내용중 긍정적인 부분은 사형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고, 12월에는 4명의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되었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시한이 1년 연장되었으며, 국제경기대회의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2001년 11월 제출된 사형폐지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진전을 보지 못했고, 국가보안법문제, 노조지도자들의 처벌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문제, 서울지검피의자사망사건,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과정의 가혹행위, 엄격한 난민 인정등이 지적되었다.



## 토론 요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노조간부들의 잇달은 분신 자살에서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노사간에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상호 긴밀히 맞물려 있다. 따라서 노사간에 갈등과 대립을 축소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양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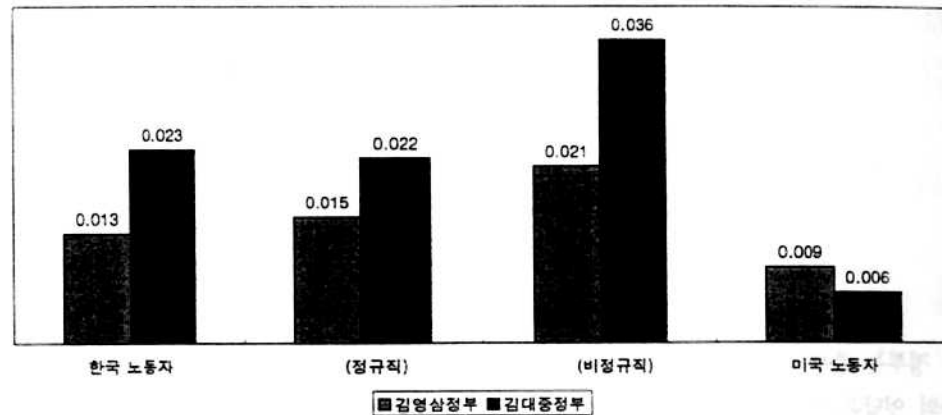
### 1. 노동시장

○ 정부는 1993년부터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를 제1의 노동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달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 외환위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 때도 한국(0.013)은 미국(0.009)보다 고용변동성이 높았다.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 때 한국(0.023)은 2배 가량 증가하고 미국(0.006)은 감소하여, 한국의 고용 변동성은 미국보다 4배 가량 높다.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 변동성이 증가했고(정규직은 0.015에서 0.021, 비정규직은 0.021에서 0.036), 한국의 정규직도 미국 노동자보다 고용 변동성이 훨씬 높다. 이밖에 노동시간과 실질임금 모두 한국이 미국보다 변동성이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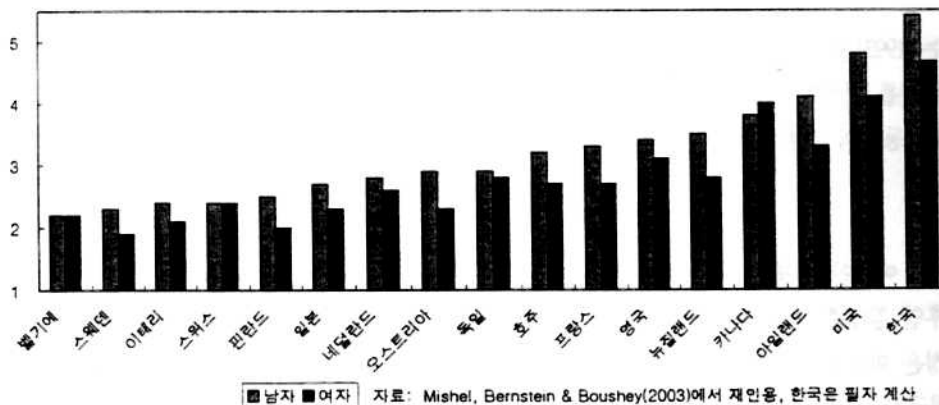


[그림1] 한국과 미국의 고용변동성 비교(외환위기 통제, 장기추세 제거, 대수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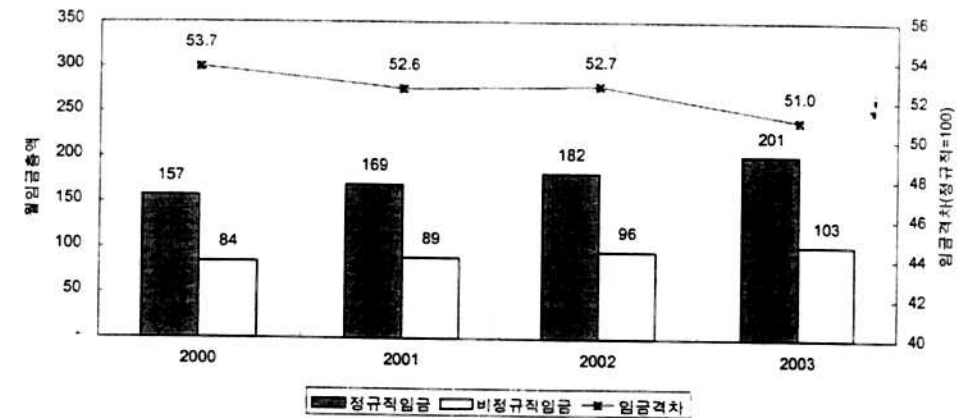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에 임금격차(90/10)를 계산하면 2000년 4.9배에서 2003년 5.6배로 증가했고,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4.3배)보다 크게 높다. 남녀 각각의 임금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더라도 남자 5.4배, 여자 4.7배로, OECD 국가 가운데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그림2] 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 국제비교 (시간당 임금 기준, 90/10 임금격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3]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격차 추이(2000-2003년, 단위:만원, %)



○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10%대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로 상징되는 극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 제도와, 임시근로 남용과 극도의 저임금 등 시장의 황포를 제어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제도를 갖고 있지 못 한데서 비롯된다. 더욱이 시장의 황포로부터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 노동정책 마저, 본말이 전도되어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1의 정책과제로 추진함으로써, 기왕의 제도마저 파괴하고 형해화 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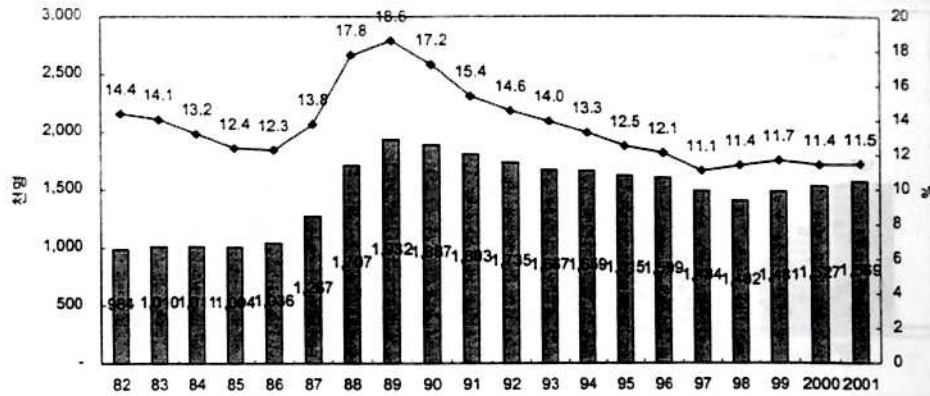
## 2. 노사관계

○ 한국의 노사관계는 10%대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협약 적용률,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교섭 체계 등 '극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처럼 분권화된 노사관계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인 '중층적으로 분단된 노동시장'과 맞물려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고용불안)과 불평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대립적·배제적 노사관계를 온존·강화시키고 있다.

-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수 100만명, 조직률 10%대라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한계는 복수노조 금지 등 법률로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강제한데서 주로 비롯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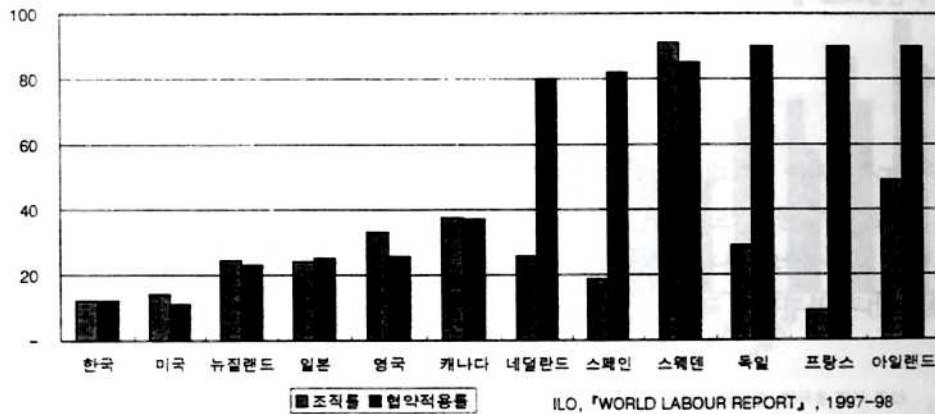


[그림4]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 추이



- 노사관계 제도가 분권화된 영미권과 동아시아권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엇비슷하다. 그러나 노사관계 제도가 집중화된 유럽대륙 국가는 노조 조직률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적용률이 80-9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대륙 국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임금소득 불평등이 크지 않다.

[그림5]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 국제비교(94-96년, 단위: %)



○ 외환위기 이후 파업은 증가 추세에 있다. 1997년에는 78건에 불과하던 파업이 2000년에는 250건, 2002년에는 322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파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1997년 495건에서 2000년 1,040건, 2002년 1,355건으로 증가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928건에서 3,918건, 4,169건으로 증가했다. 파업발생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이에 상관계수를 계산하면(로그값 기준) 각각 0.95와 0.92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1] 연도별 파업발생,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 추이

| 연도   | 파업 발생 건수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 |              |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 |
|------|----------|----------------|--------------|----------|----------|----------|--------------|--------------|
|      |          | 전체             | 1호 노조가입 활동해고 | 2호 황견 계약 | 3호 교섭 거부 | 4호 지배 개입 | 5호 단체행동 참가해고 |              |
| 1995 | 88       | 566            | 487          | 7        | 47       | 21       | 4            | 1,578        |
| 1996 | 85       | 539            | 419          | 7        | 77       | 32       | 4            | 1,632        |
| 1998 | 129      | 787            | 679          | 7        | 62       | 36       | 3            | 3,670        |
| 1999 | 198      | 950            | 821          | 4        | 61       | 47       | 17           | 3,801        |
| 2000 | 250      | 1,040          | 831          | 2        | 79       | 124      | 4            | 3,918        |
| 2001 | 235      | 1,502          | 1,366        | 3        | 55       | 75       | 3            | 5,037        |
| 2002 | 322      | 1,355          | 1,195        | 6        | 53       | 92       | 9            | 4,169        |

자료 : 노동부, 노동위원회

○ 이처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기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노동부가 단순히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 머무르지 않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기업주들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부는 부당해고 벌칙조항마저 삭제하려 하고 있다. 근로감독 행정이나 기존의 제도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법원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정과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하도급 금지,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3개 조항에 불과하고 벌칙도 경미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매년 수백 명씩 구속되지만, 사용자가 구속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2]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관련 조항 벌칙 비교

| 노동조합법                     | 노조에 대한 벌칙   | 사용자에 대한 벌칙   |
|---------------------------|---|--|
| 1년 이하 징역<br>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41조 1항)</li> <li>-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 금지(42조 2항)</li> <li>- 행정관청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중지 명령 위반(42조 3항)</li> <li>-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63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신규채용, 하도급 금지(43조)</li> <li>-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46조)</li> </ul> |
| 2년 이하 징역<br>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44조 2항)</li> <li>-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77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노동행위(81조)</li> </ul>  |
| 3년 이하 징역<br>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 비주도 파업금지(37조 2항)</li> <li>-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 방해 금지(38조 1항)</li> <li>-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 조업(38조 2항)</li> <li>- 상급단체와 행정관청에 신고된 자 이외의 3자 개입금지(40조)</li> <li>- 폭력행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점거 금지(42조 1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 위반시(85조)</li> </ul>                                    |
| 5년 이하 징역<br>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41조 2항)</li> </ul>  |  |
| 기타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  |

## 2003년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활동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 <시작하는 말>

2001. 11. 26.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만 2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격동하는 인권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각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적지 않게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으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한 힘과 권위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인정과 지지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인정과 지지는 위원회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인권의 원칙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는 모든 곳으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진정 국민에게 속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2003년 인권위의 활동을 겹쳐서 평가하고 내년을 조망하고자 한다.

### <활동내용>

위원회는 과거부터 정책, 법령, 제도 및 관행의 반인권적 요소가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되면서 인권침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왔다는 점을 중시하고, 인권침해의 근원적 해소 및 예방을 위해서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참고 : 법령, 정책, 제도, 관행의 개선에 관하여 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 자세한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이라크전 반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등의 의견표명, 과거청산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권고를 비롯하여 구금시설 내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 의견제출과 행정법 등의 개선권고,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체벌금지 및 NEIS에 대한 의견표명, 호주제에 대한 의견표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개선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노력, 평등권과 관련한 권고,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절차 상 적법절차 확립과 실현을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개인에 대한 진정과 구제와 관련하여서도 외국인노동자 관련 긴급구제조치와 권고, 유치장 및 구금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 적법절차 위반, 가혹행위 등 경찰수사과정과 관련한 권고, 장애, 성,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한 차별행위 및 평등권 침해에 대한 권고 등을 한 바 있다.<참고: 진정사건과 관련한 인권위의 구체적 활동은 별표2와 같다.>

또한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 등, 사회적 취약부분에 대한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인권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인권상황 개선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참고: 실태조사의 자세한 현황은 별표3과 같다>

출범 이래 2년동안 인권위의 활동이 주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차별에 중점을 두었던 측면이 있었으나 이는 우리사회의 인권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자유권마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 분야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분간은 이에 대한 위원회의 상당한 역량배분이 불가피하다.

한편, 자유시장 중심의 선 성장 후 분배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국가정책과 기조는 IMF 사태를 거치면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켜 노숙자·비정규직·청년실업 및 고학력자 실업·부적응 집단의 확대 등 사회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혹은 사회적 권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권의 실현은 자유권과는 달리 재정이 뒷받침된 사회정책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 미완의 권리이며, 사회·경제·정치적인 여건에 따라 그 신장의 정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권 분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원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권과 관련된 문제를 진정사건의 조사·구제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원회는 우선 미약하지만 사회권 분야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로서 인권의 사각지대

에 놓인 우리사회의 빈곤계층 및 빈곤정책에 대한 실태파악의 단초를 열기 위한 작업으로 주거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였다.<참고: 사회권과 관련한 인권위의 활동은 별표4와 같다.>

위원회는 인권의식의 함양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경찰, 검찰, 교도관과 피진정인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의 인권전문가들로 인권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여 강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경찰, 검찰, 교도관, 군인, 교사등과 공무원과 교사, 일반국민을 위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 배포, 활용하고 있다. 영화, 만화, 동화 등의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인권을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한 것도 하나의 소중한 성과이다.

위원회는 올해 국가보안법,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한 세 개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우리사회에서 첨예한 쟁점을 형성해온 주요한 이슈들로서 이에 대한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위한 준비작업 중이다. 현재 각 주제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 정책권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평가와 전망>

위원회가 각 국가기관에 대하여 진취적 관점에서 다양한 권고를 하였으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고대상 기관에서 권고수용을 지연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므로써 권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권고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소관부처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마땅히 규제할 방도가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참석하는 인권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구제나 권고에 있어 시의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성의 문제는 국가보안법문제, 노동권, 환경권, 생존권 등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개별적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에 장기



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진정사건과 관련한 시의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 표준절차 및 판단지침 수립, 조사관 전문성 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진정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위원회 지방사무소 개설이나 인력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한편으로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적자원의 신축적인 배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수집 및 사회적 의견수렴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나 중요한 사안일수록 권고나 의견표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설득하는 사회적 합의과정 또한 중시해야 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위원회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의 정의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위원회는 업무의 다양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유권의 실현과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가는 한편 사회권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인권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협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중의 하나일뿐더러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권·시민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 사안별로 유관단체와의 협력관계 증진, 위원회의 열린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행정, 입법, 사법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관으로서 소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조직, 인사업무는 행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 위원회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위원회의 과제들이다.

#### <맺음말>

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보호감호제, 사회적 빈곤문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권의 문제 등 올해 해결되지 못한 산적한 과제들에 대하여 차분하고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을 앞에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사업과 인권에 관한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외압으로부터는

독립적이되 인권시민단체를 협력자로 하여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하여 수행해나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단계 한단계 진전시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별표1 2001. 11. 26.-2003. 8. 15. 인권관련 법령, 정책, 제도개선권고>

| 연<br>번 | 사건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권고기관                       | 처리결과          |
|--------|--|---|------------|----------------------------|---------------|
| 1      | 제외동포의출입국과법<br>적지위에관한법 개정<br>(안)에 대한 의견       |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를 충족시킬<br>수 없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br>를 거친 후에 개정할 것을 권고  | '01.12.21. | 국 회                        | 검토중           |
| 2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br>11차 정부보고서에 대<br>한 의견제출         | 제9,10차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미<br>반영 사항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아<br>닌 선언적인 규정 등에 대해 보장  | 2002.2.1.  | 외교통상부                      | 일부수용          |
| 3      |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br>한 반대이견 표명                  | -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형벌<br>규정, 절차규정 및 국가기능 재편<br>에 관한 규정들이 헌법 및 국제인<br>권법 기준에 위반<br>- 테러방지 예방 및 대책은 기존의<br>법·제도로 충분히 가능함 | 2002.2.20. | 국 회                        | 수용            |
| 4      |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br>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br>제출         | 국내법과 현행제도의 검토 부진, 국<br>제조약 이행사항 및 이행을 위한 제<br>반조치 누락으로 보완   | 2002.2.26  | 외교통상부                      | 검토중           |
| 5      | 북한이탈주민의보호<br>및정책지원에관한법률<br>시행령개정(안)개선 권<br>고 | 해외여행규정 삭제   | 2002.5.8.  | 통일부                        | 미수용           |
| 6      |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br>칙제정(안)에 대한 의견<br>제출            | 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br>환자들의 거주이전 및 자치권 확보   | 2002.5.10  | 보건복지부                      | 수용            |
| 7      | 여의도 성모병원 전폐환<br>자 병동 공중보건의 배<br>치협의          | 전폐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법<br>률적, 제도적 개선 협의  | 2002.5.13  | 보건복지부<br>노동부               | 수 용<br>(부처협의) |
| 8      | 월드컵대회관련 정부정책<br>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br>의견          | 대회기간중 집회·시위 자유보호, 노<br>동기본권 행사보장, 불법체류단속의<br>자제등 권고   | 2002.5.28. | 국무총리실<br>경찰청<br>노동부<br>법무부 | 미수용           |
| 9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br>권고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가입 권고   | 2002.6.4.  | 법무부<br>외교통상부               | 수용            |
| 10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br>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br>의             | 사법경찰관의 최장 12시간 긴급감청부분<br>삭제   | 2002.6.10. | 정보통신부                      | 수 용<br>(부처협의) |
| 11     | 강릉시 조례안에 대한 의<br>견                           | 복지시설 위탁 해지사유 명확히 할<br>것을 권고   | 2002.7.20. | 강릉시청                       | 수용            |
| 12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br>안 표결관련 의견제출                  |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안에 대한<br>ECOSOC 표결시 찬성   | 2002.7.20  | 외교통상부                      | 수용            |
| 13     | 월드컵 기간중 집회·시위<br>의 자유의 현저 침해 유감              | 평상시는 물론 특히 국제행사시 국민<br>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할 것을<br>권고   | 2002.7.23. | 경찰청                        | 미수용           |

|    |  |   |            |                   |             |
|----|--|---|------------|-------------------|-------------|
| 14 |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br>따른 정책권고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을<br>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정<br>- 도로교통법 운전면허결격 사유 재<br>검토<br>-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정기적<br>인 인권교육 실시 | 2002.7.30. | 행자부<br>경찰청<br>감사원 | 수용          |
| 15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br>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자율통신제한 조치가 바람직  | 2002.8.13  | 정보통신부             | 일부수용        |
| 16 | 부랑인 시설 설치·운영<br>에 관한 개정안 의견제출          | - 노숙자를 부랑인 개념에서 제외<br>- 시설장 재량으로 입소자의 퇴소여<br>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권고   | 2002.8.13. | 보건복지부             | 수용          |
| 17 | 정부의 외국인력제도<br>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 - 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 폐지<br>- 고용허가제 도입 등 정책권고   | 2002.8.27. | 국무총리실             | 수용          |
| 18 |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br>서약제도에 대한 의견<br>표명       | 사상전향 거부행위가 인권신장에<br>기여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br>없음  | 2002.8.27. | 의문사진상<br>규명위원회    | 수용          |
| 19 | 학교생활규정(안)에 대<br>한 권고                   | 체벌금지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생<br>참여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및<br>동시행령 개정 등 권고  | 2002.9.9.  | 교육부               | 미수용         |
| 20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br>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br>제출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복지법에<br>따른 아동복지시설 포함   | 2002.9.24  | 청소년보호<br>위원회      | 입법과정<br>진행중 |
| 21 | 보험업법개정법률(안)<br>제165조에 대한 의견<br>제출      | 보험사기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br>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한<br>조항 삭제 요청  | 2002.9.25. | 재정경제부             | 수용          |
| 22 | 반인도적범죄등의<br>처벌에관한특별법(안)<br>검토의견 제출     | 법안 편제의 수정<br>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의 재고  | 2002.9.27  | 법무부               | 입법과정<br>진행중 |
| 23 | 의문사진상규명에관<br>한특별법 한시규정                 | 조사기간의 한시규정 개정 또는<br>폐지, 강제력 있는 조사권 부여   | 2002.10.28 | 의문사진상<br>규명위원회    | 일부수용        |
| 24 | 초·중·고교 제7차 교<br>육과정 교과서 내용 직<br>권수정 권고 | 인권의식 신장을 제한하는 조치 수정,<br>차별적 인식조장 내용 수정  | 2002.10.28 | 교육인적<br>자원부       | 수용          |
| 25 | 생명윤리및안전에관<br>한법률제정안에 관한<br>의견 제출       |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br>생명업무에 상업적 영리추구 기관<br>의 참여·업무위탁 제한·축소 등                                       | 2002.11.4  | 보건복지부             | 입법과정<br>진행중 |
| 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br>행령 개정권고                  | 산업재해 판정시 남녀차별 문제 시<br>정   | 2002.11.25 | 노동부               | 수용          |



|    |                               |  |           |           |               |
|----|-------------------------------|--|-----------|-----------|---------------|
| 27 |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에 대한 개선 권고         | 변호사 수사 참여 제도 관련 변호사 조인 사항 확대, 공무집행방해죄 대상 신설 제한 등                       | 2003.1.2  | 법무부       | 검토중           |
| 28 |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방지, 외국인 노동자 송출기관 정부일원화           | 2003.2.10 | 국회의장 국무총리 | 수용            |
| 29 | 여성협약 제5차 정부이행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제출  | 동성동본금혼, 가족성채택, '차별'의 정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 등 구체적 의견 제출                  | 2003.1.22 | 외교통상부 여성부 | 검토중           |
| 30 |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 소년의 보호관찰 등에 대한 조회와 회보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 2003.3.10 | 법무부       | 입법과정 진행중      |
| 31 |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삼청교육 전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권고                         | 2003.3.10 | 국 회 국방부   | 국회검토중 국방부 미수용 |
| 32 | 호주제에 대한 의견제출                  | 호주제도의 인권침해성에 대한 의견 표명  | 2003.3.10 | 헌법재판소     | 검토중           |
| 33 |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북파공작원의 실체인정,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권고                               | 2003.3.12 | 국 회 국방부   | 검토중           |
| 34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 관련 법령에 관한 의견표명 | 지방병무청장의 자의적인 병역감면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 수정 등 전면개정                | 2003.3.24 | 국방부 병무청   | 검토중           |
| 35 |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반전·평화·인권  | 2003.3.26 | 국 회       | 미수용           |
| 36 |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와 재취득 제한 규정, 초보운전자 특별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 2003.4.15 | 경찰청       | 수용            |
| 37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근로자의 안전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사업주의무 등 규제 강화 등 개선 권고                     | 2003.4.15 | 노동부       | 검토중           |
| 38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 독학 학위취득 시험의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                            | 2003.4.30 | 교육인적자원부   | 수용            |
| 39 |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 NEIS의 개발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 교원인사기록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                 | 2003.5.12 | 교육인적자원부   | 검토중           |
| 40 |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외국인 지문날인 대상자를 "강제되거나 명령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     | 2003.7.14 | 법무부       | 검토중           |
| 41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합특별법의 제정을 권고 | 2003.7.14 | 국회의장 국무총리 | 국회입법 진행중      |

|    |                       |  |           |       |     |
|----|-----------------------|--|-----------|-------|-----|
| 42 | 공중위생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신설하는 영업의 제한 규정(제9조의2)이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 | 2003.8.25 | 보건복지부 | 검토중 |
| 43 |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수용자의 집필권보장을 위하여 행형법제33조의3과 행형법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2003.8.25 | 법무부   | 검토중 |



<별표 2 진정사건관련 위원회 활동>

| 진정사건 6,121건(2001.11.1-2003.8.31) |             |                |            |               |            |
|----------------------------------|-------------|----------------|------------|---------------|------------|
| 인권침해 4,892(79.9%)                |             | 차별행위 387(6.3%) |            | 기타 842(13.8%) |            |
| 계                                | 4892(100.0) | 계              | 387(100.0) | 계             | 842(100.0) |
| 검찰                               | 419(8.6)    | 장애             | 40(10.3)   | 사인간침해         | 167(19.8)  |
| 경찰                               | 1,339(27.3) | 병력             | 16(4.1)    | 화사            | 51(6.1)    |
| 국정원                              | 35(0.7)     | 사회적신분          | 63(16.2)   | 기타단체          | 8(1.0)     |
| 특별사법경찰관리                         | 54(1.1)     | 출산지역           | 6(1.6)     | 재산권           | 46(5.4)    |
| 자자체                              | 113(2.3)    | 출산국가           | 23(5.9)    | 법령 제도         | 252(29.9)  |
| 사법기관                             | 96(2.0)     | 출산민족           | 1(0.3)     | 압법 재판         | 51(6.1)    |
| 압법기관                             | 2(0.0)      | 인종             | 1(0.3)     | 기타진정          | 267(31.7)  |
| 기타국가기관                           | 350(7.2)    | 피부색            | 1(0.3)     |               |            |
| 구금시설                             | 2,246(45.9) | 성별             | 14(3.6)    |               |            |
| 보호시설                             | 72(1.5)     | 혼인여부           | 3(0.8)     |               |            |
| 군검찰                              | 4(0.1)      | 임산출산           | 2(0.5)     |               |            |
| 군헌병                              | 45(0.9)     | 가족상황           | 3(0.8)     |               |            |
| 기무사                              | 9(0.2)      | 성적지향           | 4(1.0)     |               |            |
| 군구금시설                            | 5(0.1)      | 나이             | 13(3.4)    |               |            |
| 기타군사                             | 108(2.1)    | 용모등            | 4(1.0)     |               |            |
|                                  |             | 종교             | 9(2.3)     |               |            |
|                                  |             | 사상정치적의견        | 8(2.1)     |               |            |
|                                  |             | 전과             | 8(2.1)     |               |            |
|                                  |             | 평등권침해          | 141(36.4)  |               |            |
|                                  |             | 기타             | 27(7.0)    |               |            |

①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6 ~ 2003. 8.31) (건)

| 구 분      | 접 수<br>(A) | 사 건 종 결 |            |          |          |         |          |      |       |     |          | 조사<br>진행<br>(A-B) | 처리<br>율<br>(B/A) |
|----------|------------|---------|------------|----------|----------|---------|----------|------|-------|-----|----------|-------------------|------------------|
|          |            | 소계(B)   | 고발<br>수사의뢰 | 징계<br>권고 | 긴급<br>구제 | 권<br>고* | 합의<br>권고 | 가각   | 각하    | 이송  | 합의<br>종결 |                   |                  |
| 계        | 6,121      | 3,774   | 9          | 19       | 4        | 72      | 5        | 551  | 3,024 | 78  | 12       | 2,347             | 61.7             |
| %        | -          | 100.0   | 0.2        | 0.5      | 0.1      | 1.9     | 0.1      | 14.6 | 80.2  | 2.1 | 0.3      | -                 | -                |
| 인권<br>침해 | 4,892      | 2,971   | 9          | 19       | 4*       | 46      | 5        | 499  | 2,304 | 77  | 8        | 1,921             | 60.7             |
| 차별<br>행위 | 387        | 221     | -          | -        | -        | 23      | -        | 36   | 157   | 1   | 4        | 166               | 57.1             |
| 기<br>타   | 842        | 582     | -          | -        | -        | 3       | -        | 16   | 563   | -   | -        | 260               | 69.1             |

\*] 동일 진정사건에 대하여 긴급구제조치와 징계권고조치가 이루어져 징계권고 1건으로 계산

\*\*] 정책권고 : 인권침해 2건, 차별행위 1건, 기타사건 1건 포함

※ 2003년도 주요조치 현황(2003. 1. 1 ~ 2003. 8.31)

(건)

| 구 분  | 계  | 고발 및<br>수사의뢰 | 징계권고 | 제도개선<br>교육권고 | 합의권고 | 합의종결 | 긴급구제<br>권고 |
|------|----|--------------|------|--------------|------|------|------------|
| 계    | 80 | 6            | 3    | 57           | 2    | 10   | 2          |
| 인권침해 | 62 | 6            | 3    | 41           | 2    | 8    | 2          |
| 차별행위 | 17 | -            | -    | 15           | -    | 2    | -          |
| 기 타  | 1  | -            | -    | 1            | -    | -    | -          |

② 직권조사 사건 처리 현황(2001.11.26 ~ 2003. 8.31)

(건)

| 구 분  | 조사결정 | 조사진행 | 조사종결 | 비 고                     |
|------|------|------|------|-------------------------|
| 계    | 4    | 1    | 3    |                         |
| 인권침해 | 2    | -    | 2    | 2건에 대하여 고발 및 제도개선 권고 조치 |
| 차별행위 | 2    | 1    | 1    | 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 권고조치       |



③ 진정사건 각하 사유별 내역(2001.11.26 ~ 2003. 8.31)

(건)

| 사건구분 | 계     | 각 하 사 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                                |                           |                            |                        |                                    |     |
|------|-------|-----------------------------|--------------------------------|---------------------------|----------------------------|------------------------|------------------------------------|-----|
|      |       | 조사대<br>상 아님<br>(제1호)        | 명백히<br>거짓<br>사유입<br>증<br>(제2호) | 조사<br>원치<br>않음<br>(제3-8호) | 1년이상<br>경과후<br>잔정<br>(제4호) | 구제절차<br>진행·종결<br>(제5호) | 법원 판결<br>현재<br>결정에<br>반함<br>(제10호) | 기 타 |
| 계    | 3,024 | 687                         | 107                            | 1,292                     | 271                        | 504                    | 151                                | 12  |
| %    | 100.0 | 22.7                        | 3.5                            | 42.7                      | 9.0                        | 16.7                   | 5.0                                | 0.4 |
| 인권침해 | 2,304 | 245                         | 92                             | 1,179                     | 230                        | 411                    | 140                                | 7   |
| 차별행위 | 157   | 44                          | -                              | 61                        | 12                         | 36                     | 4                                  | -   |
| 기 타  | 563   | 398                         | 15                             | 52                        | 29                         | 57                     | 7                                  | 5   |

④ 인권침해 진정사건 대상기관별 처리현황(2001.11.26 ~ 2003. 8.31)

(건)

| 구 분       | 접 수<br>(A) | 사 건 종 결 |                 |          |          |     |          |      |     |       |          | 조사<br>진행<br>(A-B) | 처리<br>율<br>(B/A) |
|-----------|------------|---------|-----------------|----------|----------|-----|----------|------|-----|-------|----------|-------------------|------------------|
|           |            | 소 제 B   | 고 발<br>수사의<br>뢰 | 징계<br>권고 | 긴급<br>구제 | 권고  | 합의<br>권고 | 기각   | 이송  | 각하    | 합의<br>종결 |                   |                  |
| 계         | 4,892      | 2,971   | 9               | 19       | 4        | 46  | 5        | 499  | 77  | 2,304 | 8        | 1,921             | 60.7             |
| %         | -          | 100.0   | 0.3             | 0.6      | 0.1      | 1.5 | 0.2      | 16.8 | 2.6 | 77.6  | 0.3      | -                 | -                |
| 감 찰       | 419        | 301     | -               | -        | 2        | -   | -        | 34   | 1   | 264   | -        | 118               | 71.8             |
| 경 찰       | 1,339      | 784     | 2               | 17       | 2        | 12  | -        | 172  | 18  | 555   | 6        | 555               | 58.6             |
| 구 금       | 2,246      | 1,297   | 2               | 2        | -        | 29  | 1        | 230  | 56  | 978   | 1        | 947               | 57.8             |
| 보 호       | 72         | 39      | 1               | -        | -        | 1   | -        | 6    | 1   | 30    | -        | 33                | 54.2             |
| 군 대       | 166        | 70      | 1               | -        | -        | -   | 1        | 5    | -   | 63    | -        | 96                | 42.2             |
| 기타국가<br>관 | 650        | 478     | 3               | -        | -        | 4   | 3        | 52   | 1   | 414   | 1        | 172               | 73.5             |

□ 권고 등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2001.11.26 ~ 2003. 8.31)

( ) : 사건 수

| 구분   | 조치유형 <sup>*</sup> | 조치<br>건수    | 이 행 현 황 <sup>**</sup> |                  |           |                |                |                |          |               |          |              |
|------|-------------------|-------------|-----------------------|------------------|-----------|----------------|----------------|----------------|----------|---------------|----------|--------------|
|      |                   |             | 수 용                   |                  |           |                |                |                | 수 용      |               | 기 타      |              |
|      |                   |             | 수용                    | %                | 일부<br>수용  | %              | 대체<br>방안<br>수용 | %              | 거 부      | %             |          | %            |
| 계    | 총 계               | 66<br>(100) | 56<br>(75)            | 84.9<br>(75.0)   | 2<br>(16) | 3.0<br>(16.0)  | 2<br>(2)       | 3.0<br>(2.0)   | 2<br>(2) | 3.0<br>(2.0)  | 4<br>(5) | 6.1<br>(5.0) |
|      | 징계권고              | 5<br>(19)   | 2<br>(2)              | 40.0<br>(10.5)   | 1<br>(15) | 20.0<br>(78.9) | 1<br>(1)       | 20.0<br>(5.3)  | 1<br>(1) | 20.0<br>(5.3) | -        | -            |
|      | 긴급구제              | 5<br>(4)    | 5<br>(4)              | 100.0<br>(100.0) | -         | -              | -              | -              | -        | -             | -        | -            |
|      | 권고                | 51<br>(72)  | 45<br>(65)            | 88.2<br>(90.3)   | 1<br>(1)  | 2.0<br>(1.4)   | -              | -              | 1<br>(1) | 2.0<br>(1.4)  | 4<br>(5) | 7.8<br>(6.9) |
|      | 합의권고              | 5<br>(5)    | 4<br>(4)              | 80.0<br>(80.0)   | -         | -              | 1<br>(1)       | 20.0<br>(20.0) | -        | -             | -        | -            |
| 인권침해 | 소 계               | 48<br>(74)  | 40<br>(51)            | -                | 2<br>(16) | -              | 2<br>(2)       | -              | 2<br>(2) | -             | 2<br>(3) | -            |
|      | 징계권고              | 5<br>(19)   | 2<br>(2)              | -                | 1<br>(15) | -              | 1<br>(1)       | -              | 1<br>(1) | -             | -        | -            |
|      | 긴급구제              | 5<br>(4)    | 5<br>(4)              | -                | -         | -              | -              | -              | -        | -             | -        | -            |
|      | 권고                | 33<br>(46)  | 29<br>(41)            | -                | 1<br>(1)  | -              | -              | -              | 1<br>(1) | -             | 2<br>(3) | -            |
|      | 합의권고              | 5<br>(5)    | 4<br>(4)              | -                | -         | -              | 1<br>(1)       | -              | -        | -             | -        | -            |
| 차별행위 | 소 계               | 15<br>(23)  | 14<br>(22)            | -                | -         | -              | -              | -              | -        | -             | 1<br>(1) | -            |
|      | 징계권고              | -           | -                     | -                | -         | -              | -              | -              | -        | -             | -        | -            |
|      | 긴급구제              | -           | -                     | -                | -         | -              | -              | -              | -        | -             | -        | -            |
|      | 권고                | 15<br>(23)  | 14<br>(22)            | -                | -         | -              | -              | -              | -        | -             | 1<br>(1) | -            |
|      | 합의권고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건 | 소 계               | 3<br>(3)    | 2<br>(2)              | -                | -         | -              | -              | -              | -        | -             | 1<br>(1) | -            |
|      | 징계권고              | -           | -                     | -                | -         | -              | -              | -              | -        | -             | -        | -            |
|      | 긴급구제              | -           | -                     | -                | -         | -              | -              | -              | -        | -             | -        | -            |
|      | 권고                | 3<br>(3)    | 2<br>(2)              | -                | -         | -              | -              | -              | -        | -             | 1<br>(1) | -            |
|      | 합의권고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유형 : 징계권고, 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 합의권고(고발, 수사의뢰는 별도 구분)  
 \*\* 조치건수 : 사건수와 관계없이 권고 등 조치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5건 병합 권고 → 권고 조치 1건)



\*\*\*」 이행현황 별례

- ① 수용 : 위원회 권고 등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단, 일부 미 조치한 사항이 권고 조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할 경우 일부수용으로 기재)
- ② 일부수용 : 권고 등에 대하여 일부는 수용기로 하고 일부는 수용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 ③ 대체방안 수용 : 위원회 권고 등에 대하여 다른 방법 등으로 구제조치 완료·진행중인 경우
- ④ 수용거부 : 명백하게 수용곤란·불가를 통보한 경우
- ⑤ 기타 : 수용여부에 대하여 검토중이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별표3 실태조사 현황>

| 용역명칭                           | 용역내용   |
|--------------------------------|--|
|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외국인력제도 수립방안                               |
|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               | 장애인 노동권에 관한 심층적 현황파악을 통해 향후 장애인 노동권 보장정책의 방향   |
|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 및 장애인권과 관련 기존의 정책연구 및 통계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권 연구의 방향 제시                                |
|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   | 구금시설 내 의료자원부족 및 체계 미비로 인한 수용자 의료권과 생명권 미보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금 시설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
| 군대 내 인권실태조사를위한 기초현황 파악         | 군대 내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령 정책안 마련  |
|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 연구     | 군부대 내에서의 차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인권상황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 개발   |
|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 현행 소년 사법의 아동인권 침해영역을 조사하여 소년사법 절차상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및 각 문제 영역별 후속 연구방향 제시                  |
|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 빈곤층 기능저하 노인이 주 이용자인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 적극적, 소극적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노인인권 침해 현황 및 내용 파악 |
|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 범죄 수사 절차과정에서 피의자가 당하는 인권침해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마련                    |
|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 시설환경이 열악한 유치장 시설환경을 조사하여 유치장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나이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행위 구제 및 예방방안 마련  |
|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 민간보험회사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
| B형 간염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비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실태조사   |
|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 성장장애인이 고등교육과정에서 당하는 이중 차별 사례 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해명  |
|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현황 실태조사           | 수용자의 인권위 진정권 행사 보장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함   |



|                               |   |
|-------------------------------|---|
|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여부와 대체복무입법화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 연구   |
|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 정보화 사회로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공개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많은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 조사를 통해 개선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 학교교육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해, 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 부랑인 시설 내 노인인권 현황조사            | 부랑인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현재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침해 요소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  |
|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검토 (가정폭력법, 특례법)   |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외 법령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아동·청소년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함  |
| 시국관련 법령의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 민주화 이행기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시국 관련 법령의 입법학적 분석과 사법적 적용으로 인한 판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실태를 분석·검토함   |

<별표4 사회권관련 법률검토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사건명   | 조치내용  | 의결일자                     | 권고기관           | 처리결과         |
|---|---|--------------------------|----------------|--------------|
| 여의도 성모병원<br>진폐환자 병동 공중보건의 배치협<br>의                                | 진폐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원을 위한<br>법률적, 제도적 개선 협의  | 2002.5.13.               | 보건복지부<br>노동부   | 수용<br>(부처협의) |
| 부랑인시설 설<br>치·운영에 관한<br>개정안 의견제출<br>정부의 외국인력<br>제도 개선방안 재<br>검토 권고 | -노숙자를 부랑인 개념에서 제외<br>-시설장 재량으로 입소자의 퇴소여<br>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함<br>-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 폐지<br>-고용허가제 도입 등 정책권고   | 2002.8.13.<br>2002.8.27. | 보건복지부<br>국무총리실 | 수용<br>수용     |
| 국내거주 외국인<br>노동자 인권향상<br>을 위한 정책권고                                 |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br>불법채류자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br>방지, 외국인 노동자 송출기관 정부<br>일원화   | 2003.2.10.               | 국회의장<br>국무총리   | 일부수용         |
| 산업안전보건법시<br>행령개정안에 대<br>한 의견표명                                    | 근로자의 안전권이 폭넓게 보장될<br>수 있도록 국가 및 사업주 의무 등<br>규제강화 등 개선권고   | 2003.4.15.               | 노동부            | 검토중          |
| 국민연금법개정법<br>률안에 대한 의견<br>표명                                       | -교도소 및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br>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승<br>요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를 현행법<br>과 같이 남부예외 지역가입자로 하<br>고,<br>-남부예외 대상인 교도소 수용자를<br>행형법 제2종에 의한 교도소 등의<br>수용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표명 | 2003.8.14.               | 보건복지부          | 수용           |

#### 실태조사

| 연 도   | 과 제 명   | 비 고 |
|-------|---|-----|
| 2002년 |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br>-소년사법 절차상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방안<br>-부랑인시설내 노인인권현황조사<br>-아동·청소년관련 법령검토<br>(가정폭력법, 특례법, 청소년보호법, 노동관련법, 아동복지법) |     |
| 2003년 |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br>-주거빈곤층 사회권 보장현황 실태조사<br>-규제완화 이후 산업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br>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 전자우편 m321@chollian.net

문서번호 : 03-12-사무05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참 조 : 법조출입 및 사회부기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강곤 간사)

제 목 :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민변 특별 결의문 채택

전송일자 : 2003. 12. 08. (월)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4매

##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특별 결의문 채택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2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에서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을 맞이하여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3회째를 맞는 이번 보고대회는 매해년도 한국 사회의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는 자리로, 올해는 '노무현 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큰 주제로 하여, 제1세션에서 '노무현 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으며 제2, 3세션은 쟁점 분야에 대한 토론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안과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모색'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민변 특별결의문(별첨 참조)을 채택하고 10대 요구를 발표하였습니다.

5. 한국 사회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민변의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 바랍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특/별/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3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 첫 1년간의 인권정책 및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인권 분야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벌인 결과, 2003년 한국의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 분야에 다소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 개선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권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보여주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올해 한해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평가해 볼 때, 북미간의 대립으로 인해 국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각종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남북평화유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여 온 점, 사법제도 및 검찰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 준법서약제 폐지 및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 난민인정증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호주제폐지 법안 마련 및 여성 장관·헌법재판관 임명 등 남녀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라크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점,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현존, 국정원 강화가 유일한 목적인 테러방지법의 추진, 인권침해소지가 명백한 집시법 개악 시도 등은 우리로 하여금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과 인권개선 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품게 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가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불안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강행하는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참여정부’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한편, 분배의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극빈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생존권 위협 등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권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현재 추진 중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노조활동에 대한 견제와 노동조건의 악화를 지향하고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3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마치며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민변의 10대 요구

1. 정부는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는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평화롭고 현명한 지원책을 모색하라.
1. 정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불법쟁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즉각 시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내용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추진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원칙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외국인력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1.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와 공권력의 과잉대응에 따른 사태 악화의 책임을 조속히 인정하고 부안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1.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방적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보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라.

1. 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과 한국전쟁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등 과거사청산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즉시 화답하여야 하며, 군의원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군사법제도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1.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반인권적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인권보장이라는 기준이 국가정책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수많은 문제점의 책임이 현 정부는 물론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도 공히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무쪼록 정부와 여야 각 당이 우리의 결의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한국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앞으로 위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3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특/별/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3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 첫 1년간의 인권정책 및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인권 분야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벌인 결과, 2003년 한국의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 분야에 다소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 개선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권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보여주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올해 한해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평가해 볼 때, 북미간의 대립으로 인해 국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각종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남북평화유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여 온 점, 사법제도 및 검찰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 준법서약제 폐지 및 각종 행형제도의 개선, 난민인정증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호주제폐지 법안 마련 및 여성 장관·헌법재판관 임명 등 남녀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라크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점,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현존, 국정원 강화가 유일한 목적인 테러방지법의 추진, 인권침해소지가 명백한 집시법 개악 시도 등은 우리로 하여금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과 인권개선 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품게 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가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불안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강행하는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참여정부’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분배의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극빈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생존권 위협 등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권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해·가압류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현재 추진 중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노조활동에 대한 견제와 노동조건 악화를 지향하고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3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마치며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민변의 10대 요구

1. 정부는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는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평화롭고 현명한 지원책을 모색하라.
1. 정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불법쟁의 손해·가압류 문제를 즉각 시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내용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추진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원칙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외국인력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1.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와 공권력의 과잉대응에 따른 사태 악화의 책임을 조속히 인정하고 부안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1.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방적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



보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라.

1. 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과 한국전쟁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등 과거사청산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즉시 화답하여야 하며,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군사법제도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1.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반인권적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인권보장이라는 기준이 국가정책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수많은 문제점의 책임이 현 정부는 물론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도 공히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무쪼록 정부와 여야 각 당이 우리의 결의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한국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앞으로도 위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3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 특/별/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3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 첫 1년간의 인권정책 및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인권 분야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벌인 결과, 2003년 한국의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 분야에 다소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 개선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권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보여주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올해 한해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평가해 볼 때, 북미간의 대립으로 인해 국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각종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남북평화유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여 온 점, 사법제도 및 검찰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 준법서약제 폐지 및 각종 행형제도의 개선, 난민인정증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호주제폐지 법안 마련 및 여성 장관·헌법재판관 임명 등 남녀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라크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점,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현존, 국정원 강화가 유일한 목적인 테러방지법의 추진, 인권침해소지가 명백한 집시법 개악 시도 등은 우리로 하여금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과 인권개선 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품게 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가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불안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강행하는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참여정부’라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분배의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극빈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생존권 위협 등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권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해·가압류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현재 추진 중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노조활동에 대한 견제와 노동조건 악화를 지향하고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3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마치며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민변의 10대 요구

1. 정부는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는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평화롭고 현명한 지원책을 모색하라.
1. 정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불법쟁의 손해·가압류 문제를 즉각 시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내용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추진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원칙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외국인력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1.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와 공권력의 과잉대응에 따른 사태 악화의 책임을 조속히 인정하고 부안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1.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방적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



보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라.

1. 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과 한국전쟁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등 과거사청산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즉시 화답하여야 하며,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군사법제도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1.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반인권적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인권보장이라는 기준이 국가정책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수많은 문제점의 책임이 현 정부는 물론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도 공히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무쪼록 정부와 여야 각 당이 우리의 결의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한국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앞으로도 위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3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